

 해양수산부		<b>보도자료</b>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7. 7.(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어업정책과	담당 자	• 과장 양영진, 서기관 오성현, 주무관 조현주 - ☎ (044)200-5510, 5516, 5517		
보도일시		2020년 7월 8일(목)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 7. 8.~8. 1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량(톤) : ('17) 340 → ('18) 484 → ('19) 2,496 → ('20) 5,135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 동경 125도 15분 이동 ~ 위도 34도 20분 이북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9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의견 제출처>

-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 : 044-200-5516~5517, 팩스 044-861-9431)
-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추진배경

- 오징어 자원보호와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정하고, 법률 개정('20.2.18,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부합하게 위반사항별 법률에서 규정한 부과금액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제86조)
  - \* (법률개정) 법령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5백만원·2백만원·1백만원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20.2)
  - 과태료 부과금액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부합하게 위반 행위의 정도·횟수, 행위 주체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차등 부과
- 어업분쟁(근해채낚기·동해연안, 근해자망) 합의·조정에 따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기간 마련(제45조의3)
  - \*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포획 목적으로 동경 128도 30분(부산·울산·경북·경남 근해자망어업인은 동경 129도) 이동해역에서 어구사용 금지 설정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 개선
  - \*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법률 개정과 신고어업(법 47조) 수리간주제 규정 추가에 따른 시행령상 인용조문 정비 등

## □ 추진계획

- 입법예고(7~8월) → 규제·법제심사(8~10월) → 국무·차관회의(11~12월)

